

북한인권법 사문화하고 공수처법 개악 추진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북한인권법상 명시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외면하고 공수처법 개악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 정기국회 개회일부터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 9월 4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한변(韓辯)은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또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9월 1일부터 적어도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인 9월 4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이행과 법치주의 수호 촉구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한변은 지난 24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발송하고 31일까지 면담을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회신조차 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9일 새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공수처의 출범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서라면 있는 법도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북한인권법」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이고 퇴행적이다.

한변은 더 이상 「북한인권법」의 사문화 등 법치주의의 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 한변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 1일(화)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한변은 이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74회에 걸친 ‘화요집회’를 통하여 북한인권법 통과에 일조한 바 있다.

한편, 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이 되는 오는 9월 4일 시행하기로 했던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할 예정이다. 시상식 행사를 위해 준비한 Michael Kirby(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의 기념사 동영상도 첨부한다(한변 홈페이지에도 게시).

<https://photos.app.goo.gl/4yHQeytw75xE41Jj7>

2020. 8. 3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